

ISSN 2765-2777



Vol. **22**
2026 SPRING

고령 사회의
삶과 일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



ESG 센터 참여자 우연자 씨

자원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고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녀에게 노인일자리는 '사회와 함께하는 참여의 장'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된 노인일자리사업 변화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과 전망

권두언

- 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된 노인일자리 사업 변화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과 전망**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현장을 가다!

- 06 구청이 만든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양남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동네 노인일자리

- 12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통계리뷰

- 18 통계로 살펴본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별 수요와 특성**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정책이슈

-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 3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의 전환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운영체계로의 이행이 전제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사업량·예산의 “급감”보다는 배분 방식과 운영주체의 변화로 나타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압력과 지역 격차 재조정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즉, 균특회계는 포괄보조금 성격이 강해, 중앙이 정해 주는 개별 국고보조사업들보다 “지역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선택·조합하는 방식”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원칙·표준·안전관리 중심, 지자체는 수요 산정·사업 설계와 배분·성과관리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균특회계로의 이전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첫째, 지역 맞춤형 설계·배분의 강화이다.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수요조사 강화·대기수요 반영·유형별(공공형·역량활용형·민간형) 차별화 배분원칙 등 “지역기반 근거기반 정책”이 가능해진다. 둘째, 초고령사회 대응 지속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균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별도 목적 재원을 가진 만큼, 중앙 일반회계 내 다른 복지사업과의 경쟁보다, 지역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중장기 계획 속에 위치시킬 수 있어 지속가능성 측면의 장점이 있다. 즉, 인구감소지역정책과 지역활성화정책이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돌봄, 환경관리, 공공서비스 등 지역사회 유지가능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관점

에서의 재배분 가능성이 있다. 균특회계 전환 후에는 고령화율·취약성·재정자립도·공급 인프라 등을 반영해, “재정은 열악하지만 수요는 많은 지역”에 더 높은 국고보조율 또는 물량을 배분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조정이 정책과제로 제시된다.

한편, 잠재적 부정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첫째, 지방재정·정치 여건에 따른 “수요 과소신청” 심화 위험이다. 이미 현행 구조에서도 시도 수요조사가 ‘실질적 노인수요’가 아니라 수행기관 역량·지방재정여건·지자체장의 의지에 의해 과소 신청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균특회계로 전환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같은 균특 재원 내 다른 지역사업(교통·SOC·청년·산업 등)과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층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지자체일수록 노인일자리 물



량을 더 적게 신청하거나 축소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격차 심화 가능성이다. 노인일자리는 2015년 대비 사업량은 3배(37만→110만) 늘었지만, 기관 수는 7.6% 증가에 그쳐 이미 인프라 병목과 지역 편차가 큰 상황이다. 재정자립도와 행정역량이 높은 광역·기초단체는 균특 재원을 활용해 신규 유형(역량활용형·민간형)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반면, 역량이 낮은 지역은 공공형에만 의존하거나 물량 자체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 셋째, 중앙의 공공목표와 지역 자율성 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약 10% 수준 제공,

역량활용·민간형 비중 40% 이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균특회계로 지역 자율성이 커지면, 일부 지자체는 이 목표와 괴리되는 배분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이 국가 공공목표를 제시하고 지표·배분원칙·안전기준을 설정하되, 지역은 그 틀 내에서 자율 설계를 하는 “역할 분담형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균특회계 전환은 “재정 축소”라기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역균형·자율 운영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변화이며, 지역맞춤 설계·배분, 초고령사회 중장기 수요 대응,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재

배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지자체의 정치·재정여건에 따라 수요 과소신청·사업 축소, 유형 왜곡, 지역 격차 심화 위험도 존재하므로, 중앙·지방 역할 분담, 복합지표 기반 배분원칙, 차등보조율·증가분 배분, 실질수요(대기자 포함) 기반 수요조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노인인력개발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지역 배분 고도화’ 상황에서 단순 집행 지원기관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배분·품질관리 허브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 배분체계 개편 속 역할 변화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과 중장기 수요 급증(2050년 약 240만 명 수준 추계) 속에서, 노인인력개발원은 배분원칙 설계·모형화와 지표 관리 역할이 강조된다. 지역의 고령화 수준, 재정자립도, 복지인프라, 수행기관 역량 등을 반영한 복합지표 기반 지역배분 원칙을 제안하고, 이러한 지표 설계·업데이트를 노인인력개발원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상되는 핵심기능으로 우선은, 중앙·지방 거버넌스 허브 역할의 확대이다. 지역 자율성이 커질수록, 중앙의 직접 통제가 아닌 지원·조정·평가 허브 역할이 필수적이다. 중앙기관에서 지역지원 플랫폼으로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로, 데이터·연구 기반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지역배분 방안 등 중장기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정책 설계의 사실상 싱크탱크 기능이 이미 강화되고 있다.

2025~2050년 수요 추계, 연령·유형별 수요 구조 분석, 지역별 격차 진단 등은 향후 예산편성·배분 기준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취업연계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 공익형 노인일자리 전담 관리기관에서 고령자 인력개발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은 단순 공익활동에서 전문형 일자리, 민간 일자리, 노인 역량 활용형 일자리로 확대되는 방향이다. 따라서 노인인력개발원도 직무교육, 직무인증, 취업연계, 기업연계 등 인적자원 개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노인 돌봄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업을 설계하는 고령사회 정책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참고문헌

- 조준행(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 2025). 노인일자리의 지역별 분배 현황 및 쟁점. 고령사회의 삶과 일, 통권 제19호
-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노인복지 분야. 월간복지동향, 2025년 11월.
- 김가원, 조준행, 김태일, 강은나, 이지혜, 김지민, 장보현(2025). 노인일자리사업 수급전망과 지역배분 방안(1):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원칙.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교육의 현황과 정책방안(2023). 고령사회의 삶과 일, 통권 제11호.



구청이 만든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청에 있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에는 다양한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일찍이 노인일자리기관으로 설립된 시니어클럽이 전체 사업단의 46.5%를 차지하고 사업의 41%를 차지하지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도 약 15%씩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기관들과 함께 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영하고 있는 수행기관도 137개소로 전체의 10.5%를 차지한다.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도 그중 하나다. 1호선 제물포역에서 내려 10분쯤 걸으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이 있는데, 구청 부지 안쪽으로 들어가니 별도의 건물에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자리잡고 있었다. 예전에 초등학교로 쓰던 건물이라고 했다. 복도를 따라 일렬로 늘어선 방들이 작업장이고 교육장이고 그랬다. 천연비누 [자연담향]을 만드는 공방엔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섯 분이 모여 행사에 쓸 열쇠고리를 제작하고 계셨다. 상시 60~7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지나니 총 49명

의 상근자가 두 개의 사무실에서 64개 사업단, 4,545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었다. 바쁘게 일하는 사무실을 나와 달콤한 향기를 따라 지하로 내려가서 출입문 두 개를 통과하니 우리밀 수제쿠키 [쿠키지] 사업장을 있었다. 살짝 엿보니 전신 위생복을 착용한 참여자들이 주문받은 쿠키를 굽고 계셨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은 2023년부터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화 센터장님, 2008년 기관 설립 때부터 일해 온 '살아있는 역사' 신희정 부장님을 모시고 진행하였다.



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지자체 직영모델은 무엇이 다른가

센터장 업무실의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는 것은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현황판이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526명의 절반에 가까운 2,108명이 대기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다양한 사업단의 이름과 참여인원 그리고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실, 이렇게 게시해놓고 일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업과 담당자를 기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이렇게 일자리의 유형과 특성, 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역량과 선호를 가진 참여자, 또 사업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유무형의 생산품과 서비스가 다채롭다는 것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면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무엇이 특별할까? 지자체가 설립하고 직영하고 있는 '지자체 직영 모델'이기에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김태화 센터장은 지자체 직영모델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설립하여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현장에서 필요한 복지나 고독사 예방 등의 문제까지 접목하여 수행하는 것을 역할"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밝혔다. 다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다르게 미추홀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일들을 노인일자리와 결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가 갖는 차별성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미추홀실버센터] 사업단이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단절된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려는 구청의 요청으로 이 사업단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할 참여자를 모집하자, 지원자는 당초 예상했던 참여자 수의 두 배를 넘었다. 상담업무를 경험한 전직 교사 등을 주로 선발했다. 그렇게 24명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로 '콜센터'가 만들어지자 구청에서는 이분

들이 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고 지역방송인 남인천방송도 위기가구 발굴사업을 홍보하여 측면에서 지원했다. [미추홀실버센터]는 1인 가구 실태조사, 고독사예방사업, 지자체 사업의 정책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해왔다.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민을 찾아내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결하기도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6-7개월 동안 2만 통에 가까운 전화 상담 업무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직원이지만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공무원이 아니기에 전화상담을 통해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다루고 보호해야 하는 것도 센터가 책임져야 한다. 처음엔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하는 주민도 있어서 이전 지자체로부터 전화상담이

나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받아 일을 할 때는 먼저 구청에서 문자로 알리고 그 다음에 [미추홀실버센터]가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청과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표적화하여 모집하기도 한다. 폐지수입노인 200명의 명단을 받아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직접 문의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직영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미추홀구청의 관심은 비단 구청 옆에 자리를 잡게 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의 수요조사와 실태파악에 활용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가 2021년부터 3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

업 평가에서 대상을 받고, 그 이듬해엔 최우수상, 그리고 2025년엔 또다시 대상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던 신희정 부장은 “무엇보다 매년 500개



공동체사업단 '신나는 공동작업장' 활동 모습

씩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 전국에서 단일기관으로 제일 많은 참여자를 가지게 된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일자리 규모를 늘리는 데 지자체가 앞장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런 사업량을 확대한다고 저절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4명에서 출발하여 현재 49명이 일하는 기관이 될 때까지 부단히 사업단을 관리하고 신규 사업 아이템도 끊임없이 발굴해오고 시도하고 정착시켰던 과정이 올해로 어언 19년째에 이른 것이다.

우리 기관의 세 가지 대표사업을 꼽으면

수많은 사업단 가운데 대표사업, 자랑할 만한 사업을 꼽아달라고 하니 주저없이 '지브라운카페'라고 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일단 외부로 나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요.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 식음료 관리 교육,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CS교육 같은 것을 준비해서 실시하고 나면 매장별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십니다. 카페지만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셔서 사랑방처럼 이야기하고 회의도 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 매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카페 지브라운]은 출발부터 구청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해주어 임대료 걱정없이 카페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구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카페가 필요하다면 그 공간에 [카페 지브라운]이 입점하여 매장을 늘려가게 되는 것이다. 한 카페당 많게는 1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벽면에 사업단 명단을 보니 [카페 지브라운] 도화점, 청운대점, 주안점, 용현점, 미추홀점이라고 쓰여 있었다, 바로 작년 2025년



김태화 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체사업 공모전에 응모하여 받은 6천만원으로 도화점 오픈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시니어카페는 이제 미추홀구 곳곳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시니어의 공간을 만들어나갈 뿐 아니라 HACCP 인증을 받은 우리밀 수제쿠키 쿠키지의 판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꼽는 대표사업은 [독서지도사]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다. 독서지도사는 지역 내 초등학교들과 연계하여 한 학기 동안 책 한 권을 정하여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처음 학교에 제안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그게 성공적이어서 학급 수를 확대했다고 했다. 주로 1-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5학년 대상의 학급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독서지도사로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전직 교사들이 많다고 했다. 학생들을 가르쳐온 수 십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책을 매개로

한 새로운 교육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 사업이다. 문화적 관심과 역량이 높은 이 사업 참가자들은 창작을 토대로 인형극도 하고 다큐멘터리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는 등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새로운 문화 활동들을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펼쳐나가는 사업단이라고 했다.

세 번째 사업은 공익형에서 시작한 [녹색도시사업단]을 소개했다.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 역시 구청에서 투자하여 학교 주변에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이끼 판넬을 설치했는데 규칙적으로 이끼 판넬에 스프레이로 물을 주고 관리하는 업무가 녹색도시사업단에 속한 참여자들의 일이라고 했다. 이 사업은 김태화 센터장님이 ESG(환경·사회·협치) 교육을 받아 컨설팅 자격증을 받고 이를 기관 운영에 적용할 뿐 아니라 사업모델에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실제로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구청과 함께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하고 종이컵 등 일회용품 쓰지 않기 위해 모든 컵을 다회용으로 바꿨다고 했다. [녹색도시사업단]이 관리한다는 이끼판넬은 다행히 인터뷰를 진행한 공간에도 설치되어 있어 실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

노인일자리를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보는

2023년 구청장으로부터 2년 임기 계약직 4급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았던 김태화 센터장은 노인장기요양 현장에서 오래 일해왔고 사회복지를 공부했기에 노인복지현장과 노인 당사자에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어르신들에게 정말 맞는지, 편안한지 그 결과를 관련 업체에 전달해주는



공동체사업단 '신나는 공동작업장' 활동 모습

[시니어 사용성 평가단]이라는 사업단을 구상한 것도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사회 곳곳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에 임명되고 와서 받은 첫인상은 너무 일이 많고, 직원들이 힘들게 일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 한 일 중 하나가 구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직원을 한 명 늘린 거다. 아무래도 조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게 센터장으로서 희망이라고 했다. 모든 직



공동체사업단 '쿠키지' 활동 모습

원들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죄인”이라며 그래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49명이 일하는 직장에서 직원들과 같이 1박 2일 연수 한번 가는 예산도 없는 것도 기가 막혀 겨우겨우 마련해서 올 4월에는 드디어 강화도로 전 직원이 워크숍을 간다고 했다. 가서는 사무실을 벗어난 새로운 환경에서 숨도 돌리고 새로운 일자리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김태화 센터장은 ESG 경영 교육과정까지 들은 터라 조직문화를 바꾸어보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다. 직원들이 편안해야 사업 성과도 나고, 조직이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상명하달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의사결정을 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했다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배우기도 하고, 배운 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

사를 하기도 했다. 사실, 워크숍을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그 의견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조직문화개선 지원사업에도 신청하여 다같이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기도 했다. 교육을 통해 조직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서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김태화 센터장은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만나 일하게 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연결될 것임을 믿었다고 했다. 미추홀구 주민이기도 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역량을 발휘하고 삶에서 원동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렇게 노인과 노인일자리를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인터뷰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이연숙 사회복지사, 우연자 참여자, 장순근 참여자
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사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 보호와 사회참여를 함께 실현



왼쪽부터 이연숙 사회복지사, 우연자 참여자, 장순근 참여자

노인일자리는 전국 공통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여건과 과제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넘어, 지역에 어떤 일이 필요하며 그 일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일자리 역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인천시 미추홀구 소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의 필요를 노인일자리와 연결한 사례다.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미추홀구는 공동주택에 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우리동네 ESG센터는 이러한 지역 여건에서 출발해 투명 페트병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세척·건조·분류·압축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환경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어르신들이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플라스틱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고, 그 활동은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일로 이어진다. 이처럼 환경(E)과 사회적 가치(S)를 동시에 실현하는 활동은 노인일자리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 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호 ‘우리동네 노인일자리’에서는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에서 담당자와 참여 어르신을 만나, 지역의 필요에서 출발한 일이 어떻게 어르신들의 새로운 역할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는 어떤 사업단인가요?

·**이연숙 사회복지사** 미추홀시니어클럽의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 사업은 미추홀구 전역에 폐자원을 수거하고 자원화하는 지역완결형 자원순환 모델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며, 자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공정을 운영합니다. 가장 핵심인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우리동네자원순환단’이 수거한 페트병은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 재생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해서 제작된 재생장갑 등은 다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게 합니다. 그 외의 다양한 재활용 자원들은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전문업체에 판매함으로써 관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인 우리동네 ESG 사업단은 이렇게 모인 다양한 폐자원을 수집·이동시키고 부피를 줄여 판매 가능한 상태로 압축하는 핵심 물류와 판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지역사회와는 어떤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이연숙 사회복지사** 저희는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와 강력한 파트너십이 뿌리가 되어 있는데요. 구청에서 설치한 무인 수거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인 수거기를 통해 투명 페트병들을 저희가 전담 수거하고 있고 또 폐자원을 모아두는 적재 장소인 센터 공간 확보 등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자원순환과의 협업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수거거점인 어린이집과 마을 곳곳에 현황을 공유해 주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현재 사업단에는 몇 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연숙 사회복지사** 현재 저희 사업단은 약 1,4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동네자원순환단’이라고 하는 1,440명 정도의 인원은 각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을 발굴하고 수집하는 활동들을 하고 우리동네 ESG센터 내에서는 ‘재활용소재은행’이라는 사업단은 약 22명의 인원이 수집되어 온 투명 페트병이나 고철들을 분리하고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 재료로 이동시킬 수 있게 준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Q. 참여자분들은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연자 참여자** 우선 한 달에 10일 정도 하루에 3시간씩 재활용 소재 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수거된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해 세척, 건조하고 투명 페트병의 압축 과정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근 참여자** 저도 한 달에 10일, 하루 3시간씩 재활용소재은행사업에 참여하여 분리된 페트병 약 15KG 정도를 기계를 이용해 압축하는 일을 하며, 우리동네자원순환단이 수거한 캔, 병,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참여자분들은 어떤 계기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우연자 참여자** 저는 그냥 가정주부로서 계속 그냥 신앙적으로만 열심히 살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해서 알게 되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

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한 2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순근 참여자** 저는 일자리를 찾던 중 현수막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고 우리동네 ESG 사업단은 작년에 참여해서 올해까지 2년 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참 행복하고 지금도 일을 하면서 즐거움에 마음이 흐뭇하고 참 편안합니다.

Q.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후로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으신가요?

·**장순근 참여자** 여태까지 페트병을 버릴 때는 집에서 그냥 자원이다 생각하지 못하고 버렸던 것을 제가 일을 하면서 식구들과 지인들한테 이것을 알리면서 페트병을 자원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자원을 아파트에 분리수거 하면서도 분리하여 수거를 하게 돼서 참 기쁨입니다.

·**우연자 참여자** 집에서만 있다가 노인일자에 참여하면서 나가서 활동하니깐 활기도 있고 건강도 되찾고 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기 전에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는 그냥 먹은 그대로 버리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느끼고 나도 내가 배운 대로 주위 분들한테도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하면서 설명도 하곤 합니다.

Q.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우연자 참여자** 네,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일이 처음에



재활용소재은행

는 약간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거부감도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과 친해져서 사랑도 받고 하며 ‘아~ 내가 좋은 일자리를 선택했구나’를 느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근 참여자** 어렵다는 것보다는 우리동네 ESG 사업단에 출근해서 여러 사람과 만나는 게 행복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웃음을 갖게 되어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고 모든 게 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점이 참 고맙습니다.

Q.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의 운영 노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이연숙 사회복지사** 저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노후우는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단 연계 강화와 통합 프로세스입니다. 수거, 세척, 압축, 판매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전체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개방성과 체험교육의 결합입니다. 저희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는 어르신들의 작업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 벽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에서 바로 자원순환 과정을 배우는 체험공간을 운영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자체와의 밀착 행정입니다. 폐자원 적재 공간 확보부터 안정적인 판로 개척까지 지자체와 함께 고민해야 지속가능한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참여 어르신들의 특성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활동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통

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활동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업 운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Q.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이연숙 사회복지사 저도 작년에는 ‘우리동네 자원순환단’이라는 사업을 맡았고 올해에는 ‘우리동네 ESG센터’를 맡게 되었는데, 저는 어르신들한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환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청소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골목길을 다니면서 평범한 담배꽂초 하나만 주워도 사업단 1,500명이 동시에 줍는다고 하면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보람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근 참여자 ESG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 고생하신다, 수고 많으시다’ 이런 말

씀을 하실 때 덕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들도 페트병을 버릴 때 서로가 동참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연자 참여자 저는 재활용 소재 은행이라는 사업에서 투명 페트병을 세척하고 고열로 녹여 실로 만들면 이를 통해 빨간 목장갑이나 조끼 등을 만드는데,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과정에 저희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가장 뿌듯하고 보람이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나에게 노인일자리라란 어떤 의미인가요?

·우연자 참여자 나에게 노인일자리라 ‘사회와 함께하는 참여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근 참여자 나에게는 노인일자리라 ‘활기찬 제 인생의 2막’입니다. 문득 은퇴 후에도 이런



장난감수리 지원



체험교육 강사

일자리가 있다는 걸 늦게 알아서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Q. 앞으로 언제까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장순근 참여자 저는 지금 72세인데 지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앞으로 계속 일자리에 신청도 할 거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건강이 닿는 데까지는 더 하고 싶습니다.

·우연자 참여자 저는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전혀 저는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기쁨이 넘치고 그냥 집에서만 그냥 혼자 책 보고 이렇게 하다 어르신들을 만나서 웃음소리도 내고 같이 일도 하고 이런 것 보니까 보람이 있고 제 건강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이 좋은 선생님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연자 참여자 나에게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나누면서 스스로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순근 참여자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꼭 한 번쯤 도전해서 일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참여해



우리동네 ESG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는 지역의 환경 과제에서 출발해 노인일자리와 자원순환 활동을 연결한 사례다. 투명 페트병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세척·분류하는 활동은 지역의 환경 관리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례는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활동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기반으로 설계될 때 더욱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의 여건과 문제 해결 과정에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연결할 때,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동네 ESG센터의 사례는 노인일자리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앞으로도 지역의 필요에서 출발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때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로 살펴본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별 수요와 특성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알기 쉬운 요약

- ◎ (초고령사회 필수 사회안전망)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이 2004년 0.9%에서 2025년 10.7%로 확대되며 초고령사회의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착함
- ◎ (2050년 수요 231만 명 시대, 후기고령층 수요 확대) 2050년 노인일자리 수요 231만 명 추정, 특히 85세 이상 수요가 2.5배 이상 급증하는 구조적 변화가 예상됨
- ◎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핵심) 노인일자리사업 규모 결정의 고려요소에 대해 모든 권역은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여건'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음
- ◎ (분권형 운영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분권형 모델'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배분이 요구됨



본고는 「김가원, 조준행, 김태일, 강은나, 이지혜, 김지민, 장보현. (2025).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1):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 원칙,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가원. (2026).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 전망과 지역균형을 위한 과제, 복지저널 vol. 3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

초고령사회 진입과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5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불안정 및 사회적 고립, 돌봄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동반한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노년기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인구가 줄고 국가 및 지역의 성장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정책과 고용보장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사업으로써 2004년 도입되었다. 2026년 목표치는 일자리 수 115만 2천 개, 예산은 국비 약 2조 4천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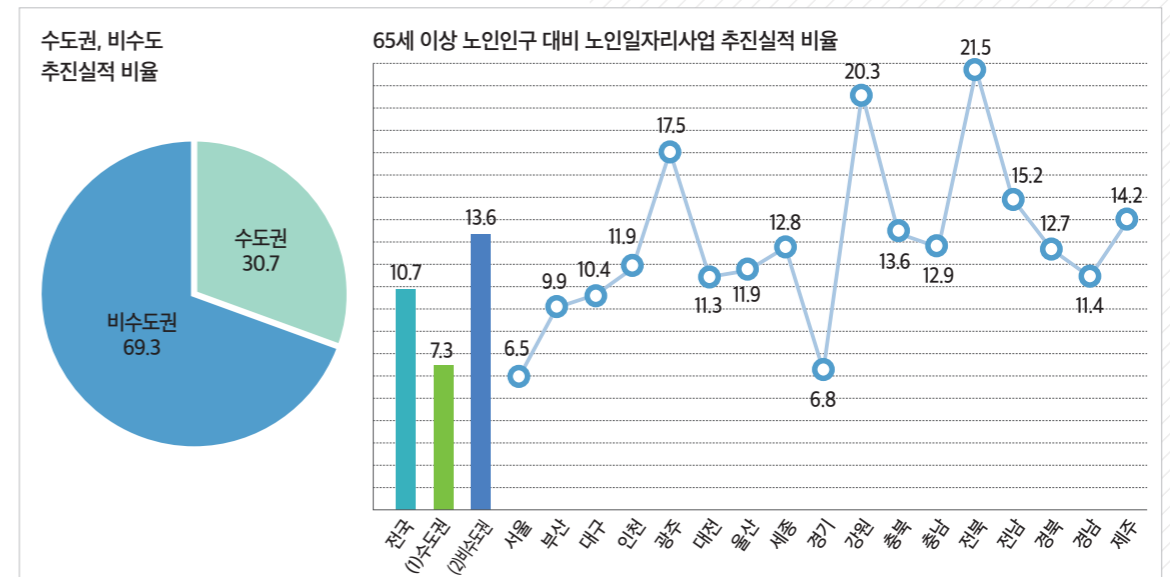
원, 지방비 약 2조 6천억 원이다. 2004년 첫해 규모는 노인인구 100명 중 1명(0.9%)이 참여하는 사업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10명 중 1명(10.7%)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비약적인 성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한시적 지원을 넘어, 고령층을 위한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방증한다(그림 1 참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 수요 추계와 연령구조 변화 전망

정부는 2025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서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일자리 지속 확충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고령세대를 넘어 사회 전체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장하는 정책으로 그 역할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중장기 관점의 정책 설계에 대한

<그림 1> 2025년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단위: %)



· 주: 2025년 12월 말 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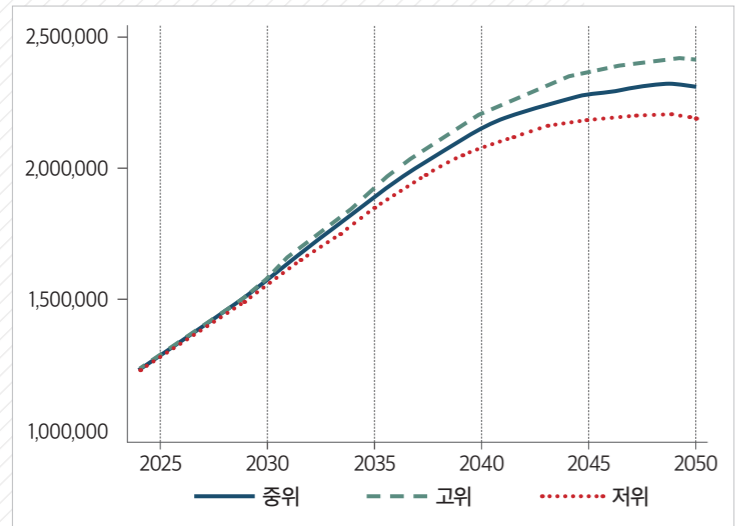
필요성도 대두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1):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원칙」 연구에서 향후 2050년까지 중장기 정책 수요의 양적 규모(얼마나 필요한가)와 질적 구조(무엇이 필요한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는 2035년 188만 4천 명(2024년 대비 1.53배), 2050년 230만 9천 명(2024년 대비 1.87배)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진은 최근 5년의 노인일자리사업 수요 규모를 기준으로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해 중장기 수요를 추계하였는데,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실질 규모는 참여자뿐 아니라 중도포기자, 대기자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했다. 특히 대기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규모의 한계로 참여하지 못한 집단으로서, 향후 공급확대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에 제한하지 않고,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정책 수요 추계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수요 전망을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림 2] 참고).

한편 연령별 수요 추계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수요는 전기고령층에서 후기고령층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후기고령층에 진입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것이 주요 동인으로 해석된다. 2050년 장기 전망을 보면, 65~69세 집단의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는 현재의 1.00배~1.04배로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85~89세의 경우 현재의 2.58배~2.77배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의 다소 획일적인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노인세대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새로운 직무 개발, 활동강도 및 활동 형태, 급여 수준 등에서

<그림 2>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수요 추계 결과('25~'5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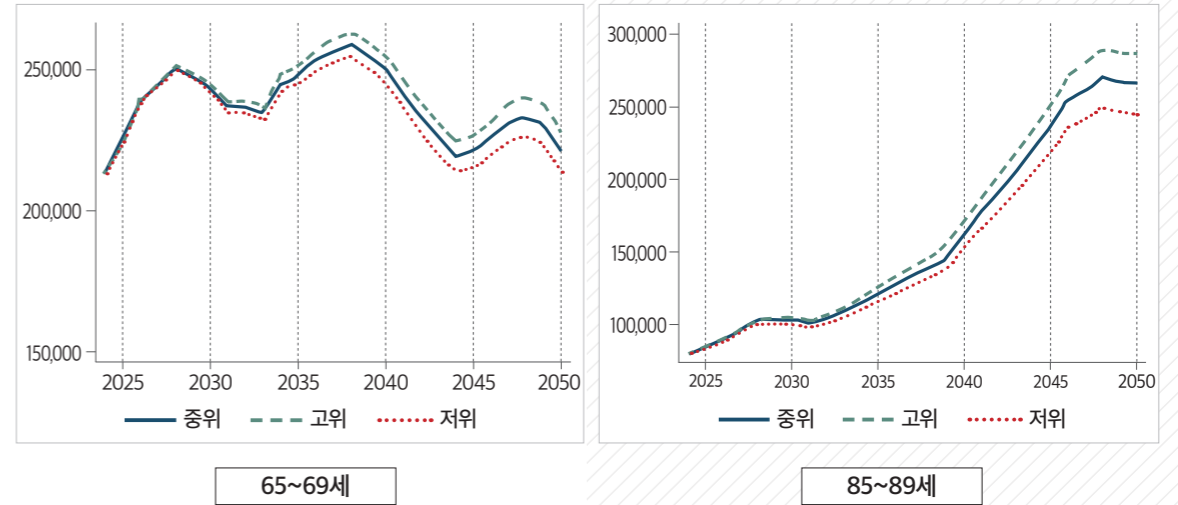


(단위: 만 명)

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량(중위 기준)
2025년	129.0
2030년	157.5
2035년	188.4
2040년	214.4
2045년	227.8
2050년	230.9
'24년 대비 '35년	1.53배
'24년 대비 '50년	1.87배

• 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도포기자, 대기자 추이 규모(2024년 기준)에 대해 장래인구추계 중위·고위·저위 규모를 적용함
 • 자료: 김가원 외(2025).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1) -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원칙,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그림 3> 노인일자리사업 연령대별 중장기 수요 추계 결과 ('25~'50, 65~69세, 85~89세 비교) (단위: 명)



• 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도포기자, 대기자 추이 규모(2024년 기준)에 대해 장래인구추계 중위·고위·저위 규모를 적용함
 • 자료: 김가원 외(2025).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1) -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원칙,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다양화가 필요하며, 특히 후기고령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저강도 및 유연한 직무설계, 노인복지 측면의 사례관리 등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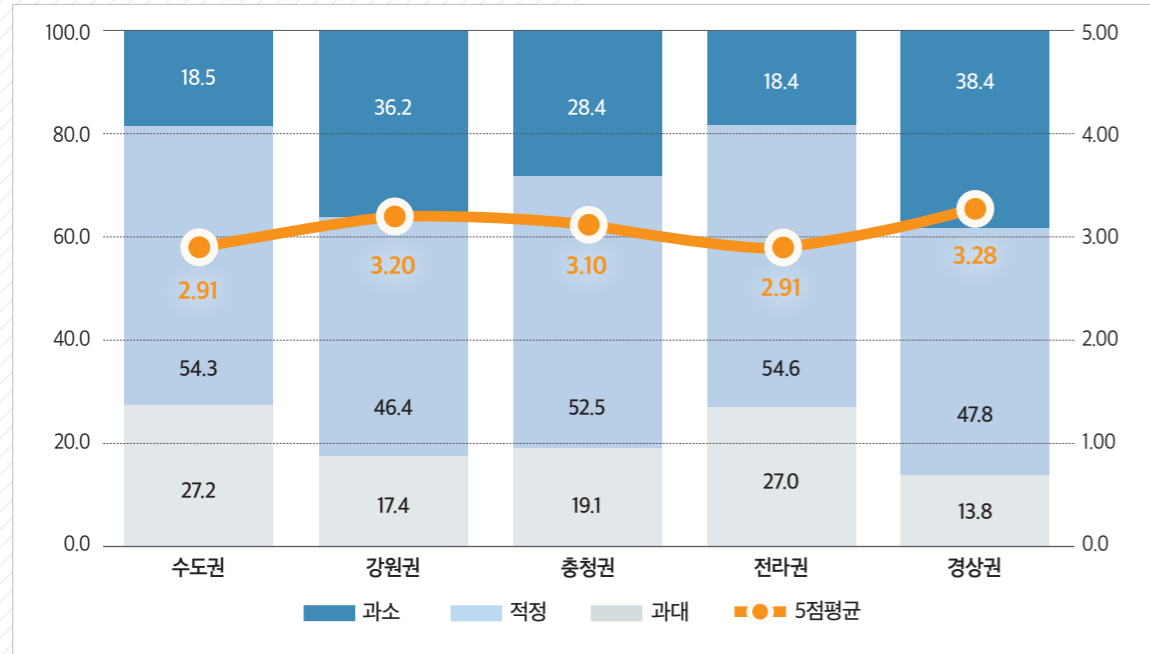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적정규모 인식과 고려요소

노인일자리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수행기관(1,19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점 기준 권역별로 경상권 3.28점, 강원권 3.20점, 충청권 3.10점, 수도권·전라권은 각각 2.91점으로 나타나 3점(적정수준) 기준 대비 경상·강원·충청권은 높게, 수도권·전라권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규모가 다소 과대하다는 의견은 경상권 38.4%, 강원권 36.2%, 충청권 28.4%, 수도권 18.5%, 전라권 18.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다소 과소하다는 의견은 수도권 27.2%, 전라권 27.0%, 충청권 19.1%, 강원권 17.4%, 경상권 13.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고). 이를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강원권 3.45점, 경상권 3.31점, 수도권 3.12점, 전라권 3.07점, 충청권 3.06점으로 모든 지역에서 3점(적정수준) 기준을 상회하여 다소 과대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과대하다는 의견 비중은 강원권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권 38.7%, 전라권 27.5%, 수도권 26.6%, 충청권 24.8%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경상권 3.21점, 충청권 2.89점, 강원권 2.77점, 전라권 2.74점, 수도권 2.71점 순으로 경상권을 제외한 4대 권역에서 3점(적정수준)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 현재 사업 규모보다 많은 수요를 드러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과소하다는 의견 비중은 수도권 3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라권 36.1%, 강원권 31.9%, 충청권 29.1%, 경상권 17.1%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체사업단은 강원권 3.35점, 충청권 3.20점, 경상권 3.19점, 수도권 3.04점, 전라권 3.02

<그림 4> 노인일자리사업 규모의 적정성 (n=1,193, 단위: %, 점/5점기준)



• 주: 수행기관 대상 조사 결과로서, “매우 부족하다 ~ 매우 과잉 공급되고 있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함.
 • 자료: 박경하 외(20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함.

점으로 노인공익활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에서 3점(적정수준) 기준을 상회하여 다소 과대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과대하다는 의견 비중은 강원권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상권 30.8%, 충청권 29.8%, 전라권 18.9% 순이며, 다만 수도권은 8.4%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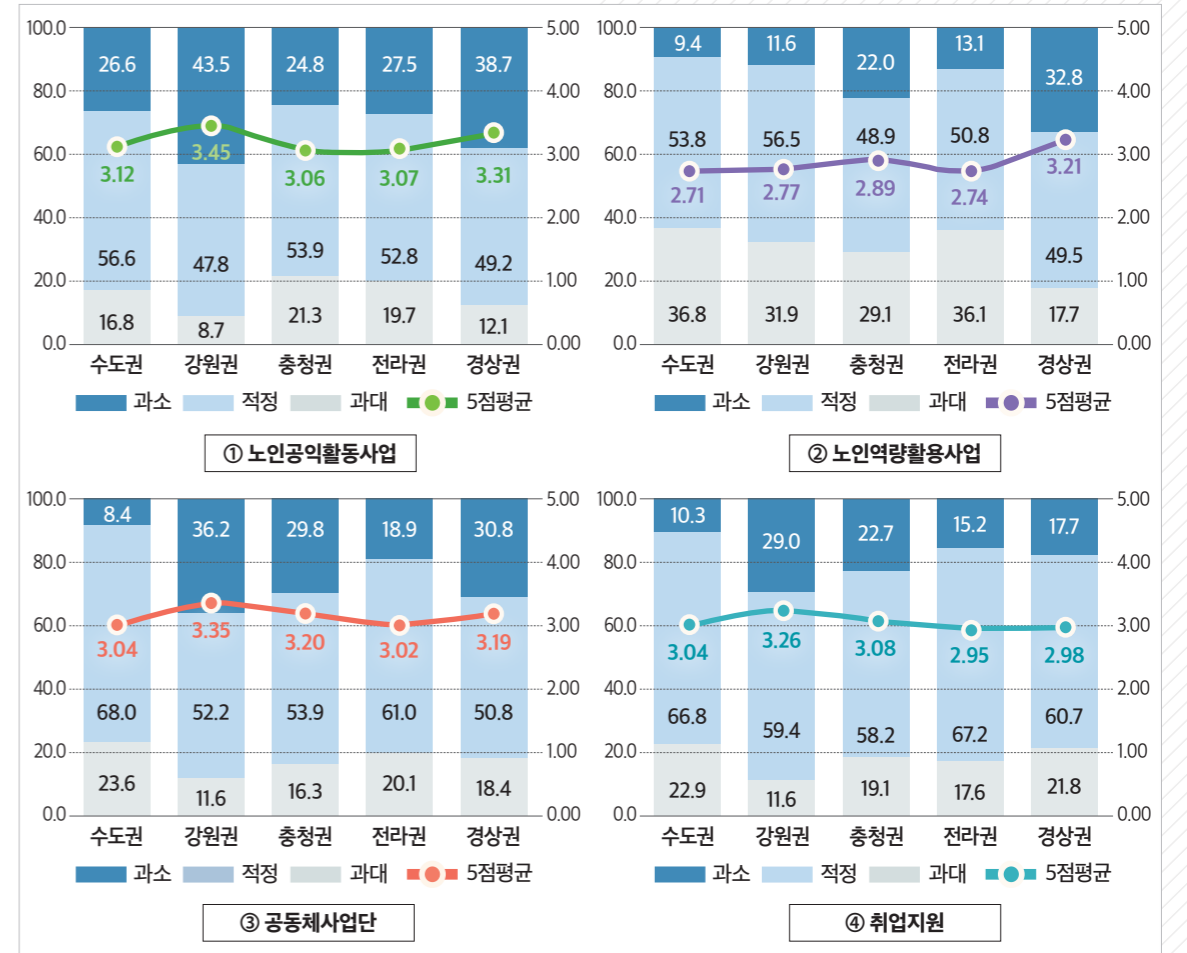
넷째, 취업알선은 강원권 3.26점, 충청권 3.08점, 수도권 3.04점, 경상권 2.98점, 전라권 2.95점 순으로 3점(적정수준) 기준을 대비 강원·충청·수도권은 높게, 경상·전라권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취업알선 사업 규모가 과대하다는 의견은 강원권이 29.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권 22.7%, 경상권 17.7%, 전라권 15.2% 순이며, 수도권은 10.3% 순으로 낮았다(그림 5 참고).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 결정 시 고려요

소를 ①노인인구 및 고령화 수준, ②노인빈곤율, ③노인수요 및 참여의향, ④수행기관 여건 및 확보가능성, ⑤담당자 확보가능성, ⑥수요처 확보가능성, ⑦지자체 예산 및 정책여건 등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항목의 중요도를 5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권역에서 3점(보통수준) 기준을 상회하여 모든 항목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중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여건’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꼽았고, ‘노인빈곤율’을 상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한 고려요소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수요층의 규모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기보다는 현장의 자원조달 가능성 및 정책 의지 등 실질적인 여건과 현실적 제약이 정책결정에 보다 민감하게 작용됨을 보여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노인인구 및 고령화 수

<그림 5> 세부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규모의 적정성 (n=1,193, 단위: %, 점/5점기준)



• 주: 수행기관 대상 조사 결과로서, “매우 부족하다 ~ 매우 과잉 공급되고 있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함.
 • 자료: 박경하 외(20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함.

준의 중요도는 강원권(4.32점), 전라권(4.31점), 충청권(4.23점), 경상권(4.21점), 수도권(4.1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노인빈곤율’은 전라권(4.20점), 강원권(4.17점), 경상권(4.12점), 충청권(4.09점), 수도권(4.08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수요 및 참여의향’의 중요도는 강원권(4.45점), 전라권(4.30점), 수도권(4.29점), 경상권(4.25점), 충청권(4.1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수행기관 여건 및 확보가능성’은 수도·전라·경상권(4.35점), 강원·충청권(4.30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담당자 확보가능성’의 중요도는 강원권(4.39점), 전라권(4.33점), 수도권(4.28점), 경상권(4.14점), 충청권(4.1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섯째, ‘수요처 확보가능성’은 강원·전라권(4.41점), 경상권(4.39점), 수도권(4.35점), 충청권(4.32점)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여건’의 중요도는 전라권(4.51점), 강원·경상권(4.49점), 수도권(4.46점), 충청권(4.41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고).

노인일자리사업의 분권형 모델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정부는 2025년 8월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하는 지방우대 원칙 시범 도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7개 재정사업 중 하나로 포함된 노인일자리사업은 2026년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우대하여, 기존 2025년 기준 약 70.4%를 배분하였던 것에서 더 비수도권에 집중하도록 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노

인일자리사업의 회계구조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제적 양극화를 견제하고, 소득격차의 공간적 확대, 즉 공간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다(허문구 외, 2023). 그러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균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고 다양하며, 자원투입

과 배분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본 고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고령화 수준, 재정 여건 및 공급 인프라, 그 외 정책적 노력과 의지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지역별 수요 특성과 쟁점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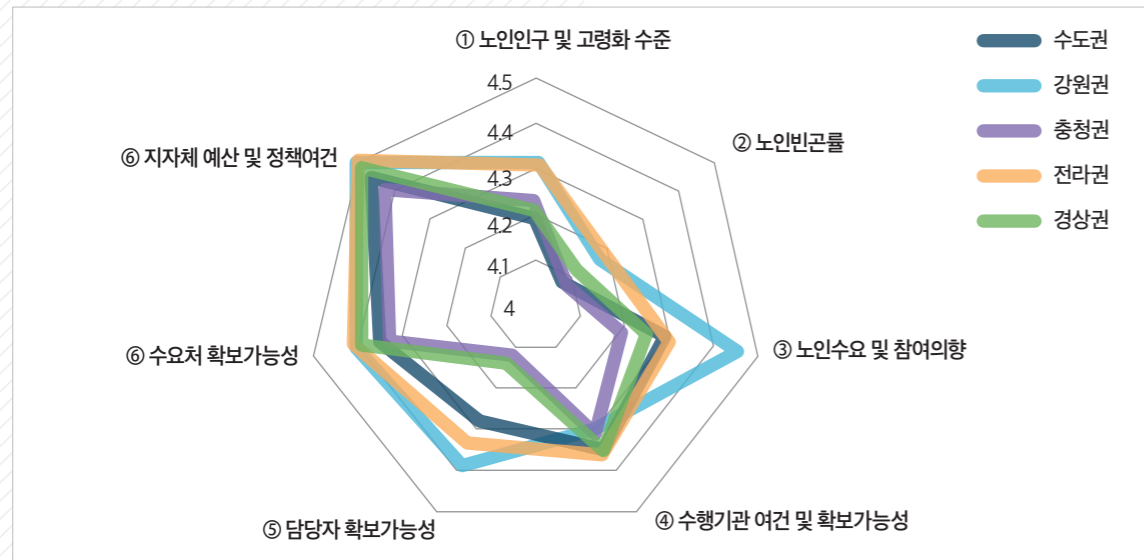
첫째,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집단은 전기·후기 고령층의 다층형 수요가 병존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실질 수요중심의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공공형은 취약·초고령층 중심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형은 돌봄 및 디지털 분야 등 전문 직무 중심 일자리 모델로 고도화하며, 민간형은 베이비붐 세대 경륜을 활용한 전환기 지원 모델로 사업 유형별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별 인구구조 및 정책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배분을 통해,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넷째, 지특회계 전환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중앙은 통제자가 아닌 기반 제공자 및 조정자,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책임 있는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회투자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정책의 초점은 얼마나 늘릴 것인지가 아니라, 성과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과 이를 뒷받침할 중앙-지방 간의 역할 재설계라는 제도적 설계로 옮겨가야 한다. 결국 노인일자리사업의 지향점은 획일적인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분권형 운영체계’로의 성공적 이행에 있다.

중앙과 지역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기능할 때, 노인일자리사업은 비로소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고 고령세대의 삶을 지탱하는 지속가능한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지역 간 공존과 상생의 정책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림 6>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 결정의 고려요소

(n=1,193, 단위: 점/5점기준)



지역	① 노인인구 및 고령화 수준	② 노인빈곤율	③ 노인수요 및 참여의향	④ 수행기관 여건 및 확보가능성	⑤ 담당자 확보가능성	⑥ 수요처 확보가능성	⑦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여건
수도권	4.19	4.08	4.29	4.35	4.28	4.35	4.46
강원권	4.32	4.17	4.45	4.30	4.39	4.41	4.49
충청권	4.23	4.09	4.19	4.30	4.11	4.32	4.41
전라권	4.31	4.20	4.30	4.35	4.33	4.41	4.51
경상권	4.21	4.12	4.25	4.35	4.14	4.39	4.49

• 주: 수행기관 대상 조사 결과로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결과를 5점기준 평균점수로 나타낸 것임.
 • 자료: 박경하 외(20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함.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 8. 22.
- 관계부처합동. (2026).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 2026. 1. 9.
- 권오성, 최순영, 소가영 외. (2024).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기획재정부. (2025).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5. 8.
- 김가원. (2026).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 전망과 지역 균형을 위한 과제, 복지저널 vol. 3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김가원, 조준행, 김태일, 강은나, 이지혜, 김지민, 장보현. (2025).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1):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 원칙,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경하, 남기철, 이소정, 강은나, 변금선, 홍민지, 장보현, 조윤수, 최윤경. (20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기관, 수요처, 기업, 공무원 대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지방시대위원회. (2025).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안, 2025. 9. 30.
- 허문구, 송우경, 김선배 외. (2023). 지역정책 20년의 공과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방향 모색,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과 노인일자리사업

: 기대 활성화와
우려 최소화를 위한 시즌2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알기 쉬운 요약

- ◎ 노인일자리사업의 회계단위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잠재된 재정쟁점과 사업 운영 개선과제를 제시함
- ◎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정규모는 20여 년 동안 200배 이상 급증했음. 지특회계 전환과 함께, 양적 자원 확충뿐 아니라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재정운영 혁신이 필요함
- ◎ 지특회계 사업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원배분 재량확대의 재정분권과 지역균형 가치가 강조됨. 회계특성을 반영하여 복지분권 혁신요소를 활성화해야 함
- ◎ 사업의 재정거버넌스가 지방 중심으로 전환됐음. 회계전환에 따라 사업내용에서 지역맞춤이 중요하고 자기책임성 기반에서 지역사회 방향의 성과책임 강화가 중요함

재정사업의 회계 단위 사업 특성을 규정하는 그릇

노인일자리사업의 회계단위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됐다. 자원배분의 권한 주체와 성과책임의 주체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운영의 관리효율성 차이가 있다. 정부회계는 재정사업의 돈과 성과가 관리되는 기본 틀을 규정하는 그릇이다. 회계제도가 개편 후 시간이 경과되면 사업의 내용과 담당자의 적응적 행태 변화가 발생한다. 정부 회계에서 나쁜 제도와 좋은 제도는 없다. 운영의 결과에 따른 평가일 뿐이다. 제도 특성에 대한 해석과 적응이 중요하다.

정부재정 관리의 일반원칙에서, 모든 재정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적으로 특별회계가 있다. 재정사업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특정 사업에 대한 자원의 충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성과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세입재원 범위 내에 세출규모를 한정짓게 하는 건전성 관리 목적의 특별회계가 있다. 지특회계에는 두 가지 특성 모두 있다.

100여 만 명의 직접 수혜자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의 회계제도 개편을 행정부 내부 방침으로 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일차적 자원배분 권한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지자체'로 이전된 회계 전환의 의미 정도는 사전에 공유될 필요가 있었다. 제도 프레임 자체에 내재된 쟁점을 이해하고 제도의 긍정적 특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제도 적응이 중요하다. 이제 사업의 복지정책 자체와 함께 재정적 특성과 그 사업이 담겨진 정부회계의 그릇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졌다.

<표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참여 예산의 재정규모 추이(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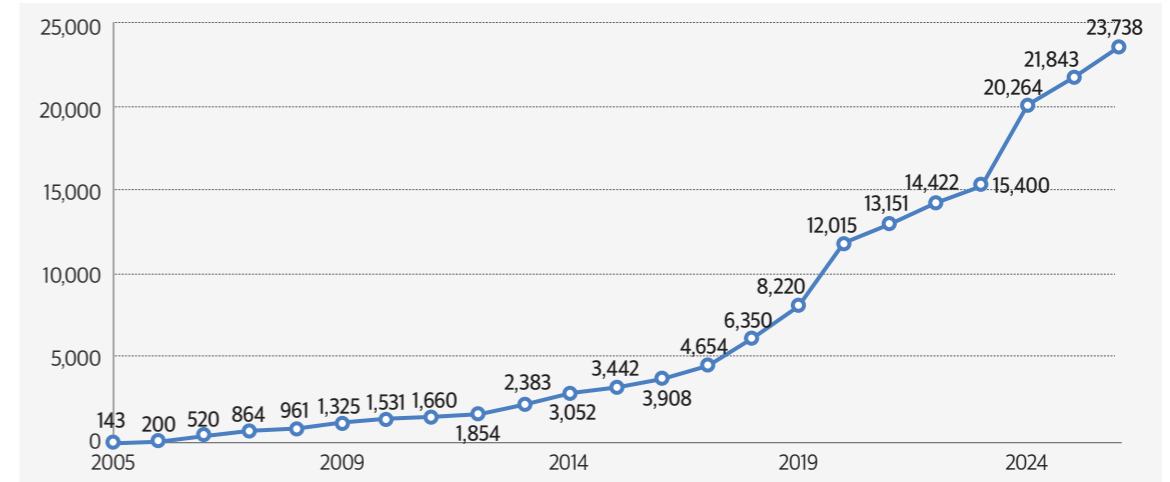
(단위: 억원)

	합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비고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2004	143	143					사업시작
2007	864	854			10		제주계정 분리
2014	3,052	3,052					제주계정 통합
2018	6,350	6,350					6천억 원 시대
2020	12,015	12,015					1조 원 시대
2024	20,264	20,264					2조원 시대
2026	23,738	-	20,993	2,310	435	113	지특회계 전환

자료 : 보건복지부 예산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림 1>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정규모 추이

(단위: 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 예산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재정'의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격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식 출범한 첫해인 2004년 예산은 일반회계(국비) 143억 원이었고 일자리 창출은 25,127개였다. 이후 예산과 일자리 규모는 급증했다.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의 국비예산은 2.4조 원이며 100만 명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충급여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노인서비스이다. 고령사회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재정 사업은 여기에 집중돼 있다. 국고보조율이 50%(서울 30%)이

기 때문에 올해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조 원 수준이고 115만 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됐다.

재정의 관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 자체의 목적 명분과 재정관리 특성에서 차이가 많다. 명분에서, 활동적 고령화의 사회투자과 보편성을 지향하고 고령사회 노인문제 대응에 대응하는 사회기반투자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의 내용과 재정방식에서 2000년대 후반이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그 사이에 5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출됐다. 사업체계,

재정회계방식, 중앙-지방간 관계, 국가-민간 관계 등에서 감당가능성과 적실성 쟁점이 누적돼 있다.

성과관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성과책임은 단순산출지표인 '일자리 창출 수'에 있다. 공익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이 배분되면 일자리는 사업예산 규모와 참여자 조건에 따라 자동 산출된다. 공익형 중심으로 참여자의 취약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점에서 선별 복지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 활동적 고령화와 관련한 결과지향적 전략적 성과로서 사회기반 확충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전략적 성과 책임은 명확하지 않다. 적정 수준에서 선별적 복지재정이 지출되는 사회적 소비 특성이 있다. 실버창업과 취업지원 사업도 있지만 재정지출 비중은 제한적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재정거버넌스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재정운영

지특회계는 중앙 재정당국이 직접 사업예산을 관리하는 독특한 회계인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제도 형식에서 지특회계 재정사업의 기본 가치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재정사업 자체가 가지는 고유 특성에 대한 고려는 후순위 위치이다.

지특회계를 재정통제와 건전성 관리에 특화된 예산당국(기획예산처)이 관리하면서 현실적으로 애매한 재정거버넌스가 형성됐다. 예산당국은 재정사업에 대한 자원 확충보다 효율화를 우선 고려한다. 기획예산처 주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초점은

'한도액설정, 감액, 폐지'이다. 재정거버넌스에서 예산당국이 담당해야 할 고유기능이다. 재정사업이 기획예산처 소관 지특회계에서 관리되면 사업자원 확충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이게 된다.

지특회계에는 네 가지 하위 계정이 있고 계정별로 재정관리방식이 다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포함된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재원은 주세,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특정 세입원의 수입 상황에 따라 계정 예산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총액한도 제한 효과가 있다. 기획예산처는 계정의 전체 총액을 지방정부별로 할당한다. 지방정부들은 할당받은 총액자원 한도 내에서 지정 재정사업에 예산 재원을 배분한다. 대상사업 수와 내용은 가변적인데, 2025년의 경우 60개 재정사업이 있었다. 사업별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규정돼 있다. 일단 총사업비가 결정되면 사업별로 기존에 해당 사업을 운영했던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국고보조사업 관리방식을 적용하여 재정사업을 운영한다.

중앙부처 담당자는 당장 특별한 변화를 인지하기 힘들다. 자원배분 권한은 부처 실무자 소관이라기 보다는 상위 직급자 혹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며 예년처럼 결정된 예산 범위 내 보조사업을 관리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는 일반회계로 부처 자체 예산사업이었지만 지금은 기획예산처 소관 사업을 위탁관리하는 형식이 된다. 자기 사업과 위탁사업에서 차이는 집행률과 성과에 대한 책임 주체이다.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사업을 평가하지 않는다.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소관으로 전환되고 중앙부처는 관리감독보다 지원기능의 위치로 전환된다.



지특회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정거버넌스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방정부의 예산부서는 자체자원과 유사하게 자원배분 자율성을 가지며 기획예산처는 계정 전체에 대해 예산규모 증가를 통제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이 총액통제와 배분재량을 교환하는 포괄보조프로그램의 재정특성이 있다. 계정 총액한도 내에서 지정된 계정사업들 간에 예산 자원 확보 경쟁 구조가 형성된다.

계정 사업의 재정기능은 다양하다. 문화관광, 농림어업, 교통, 환경, 복지 등과 같이 대부분의 재정기능이 있다. 자원경쟁의 결과는 지방의 재정거버넌스에 따라 다양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복지지출을 선호하는 지방정부는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리하다. 2025년 당초예산에서 복지 및 보건의 비중은 17.0% 수준인데 보조율은 중간 수준이다. 보조율이 낮으면 지방비 부담이 높아 자원확보에 불리하다. 자체재원이 취약한 재정낙후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조율이 높은 계정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표 2>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보조사업의 재원구성(2025)

(단위 : 개, 억원, %)

	사업수	총사업비	국비 비중과 보조율		
			국비	국비비중	국고보조율
일반·지방행정	3	3,223	2,499	7.1	77.5
문화및관광	10	3,112	876	2.5	28.2
환경	7	10,821	5,856	16.6	54.1
사회복지및보건	10	10,618	6,014	17.0	56.6
농림수산	14	14,780	9,464	26.7	64.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	3,354	1,786	5.0	53.3
교통및물류	4	7,442	4,450	12.6	59.8
국토및지역개발	3	4,094	3,222	9.1	78.7
기타	2	1,673	1,213	3.0	73.0
합계	60	59,116	35,380	100.0	59.8

주 : 2025년 당초예산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배분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성과관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책임은 제한적이다. 공익형 중심의 사업재원 배분구조에서 일자리 창출 수의 성과는 예산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전국 총사업비 규모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하지 못한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비 규모를 확정하면 지방비는 자동적으로 매칭되는 구조였다. 지금은 개별 지방정부들이 배분한 예산재원의 단순 합계에 대한 수치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는 회계기간 중 지역별·사업 유형별로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재배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하다. 지방정부 예산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재원을 교부한다. 지금의 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다. 계정 내 다른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추가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사업부서를 평가할 수 있지

만 사업비 관련 재정인센티브 수단은 제한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특회계 자율계정사업을 평가하고 미흡 판정 사업에 대한 감액을 권고한다. 하지만 우수 사업에 대한 증액 권고는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략적 사업성과 확보를 위해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과 사업관리의 적극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순응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방정부가 인지하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에 대한 순응 정도에 따라 사업비 배분 규모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간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거버넌스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영역이다. 지침 시달이 자동으로 사업순응을 보장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단위가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환됐다는 것은 예산통제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의 신호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현장의 사업수행 담당자들의 의사결정과 적용 행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서비스 사업에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 전년대비 동일한 수

준의 예산재원이 보장돼도 물가상승분과 연속근무 보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담당자는 자신의 인건비가 삭감됐다고 인식한다. 사회서비스는 경직성 높은 기본지출 경비의 몫이 있기 때문에 예산동결 혹은 총액관리 강화 현상이 발생하면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거나 수행인력의 이동이 빈번해져 관리역량이 축적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특회계 계정 전환에 따라

지켜봐야 할 쟁점들 : 복지분권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이 지특회계로 전환된 상황의 의미 해석은 재정분권에서 지특회계가 가지는 특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임의적 국고보조(포괄보조)사업이다. 기준보조율 50%(서울 30%)는 권고적 성격을 가지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기준보조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소관의 기관위탁사무와 지방정부 소관 자체사업에 대한 진흥 지원의 중간성격을 가진다. 지특회계로 회계단위가 전환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사무에서 자체사무의 비중을 강화하는 복지분권화로 해석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분권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요소들이 실제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노인일자리 재정사업의 예산규모에서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2조 원의 예산규모가 계정의 다른 사업에서는 약탈적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25년 사회복지비는 1조 원 수준이었지만 2026년에 두 배 증가했다. 지역자율계정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데 단일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원비중





이 높다. 사업예산을 기존에는 복지부-기여처가 결정했지만 지금은 기여처-지방정부가 결정한다. 지방정부별로 사정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쟁점은 성과관리체제 혹은 성과지표와 책임에 대한 변화이다. 현재와 같이 일자리 창출 수에 대한 성과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개발과 결과지향적 성과 창출이 가능할지 확인해야 한다. 성과목표에서 도전성 혹은 현재 수준 고착화 정도에 대한 상황도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쟁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별 자원 구성변화와 지방정부별로 사업의 전략적 방향설정 등에 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을 표준적으로 수용하여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특성과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지방맞춤형 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 쟁점은 지방정부 내 복지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중심의 수직체계가 지방정부 내 기획예산-사업 부서간 수평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지특회계 자원배분에서는 자체 예산부서와 협력이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한데, 현실은 낙관하기 쉽지 않다. 이재원 외(2017)에서는 2005년 분권교부세를 통해 지방이양된 복지보조사업 67개 사업에 대한 지역정책 정도를 확인했었다. 당시 지방이양 10년지났지만 거버넌스 변화는 없고, 여전히 중앙방향 책임과 소통이 더 활성화된 상태였다.

복지분권, 노인일자리사업 시즌2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재정사업에서 지특회계 전환의 의미는 복지분권, 지역맞춤, 예산효율화 등의 세 가지이다. 재정 및 사업 가치에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다. 지특회계 회계전환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즌2를 의미한다. 가장 큰 의미는 복지분권의 맥락이다. 2005년 분권교부세를 통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당시에 비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지분권이 좋은 결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미국의 복지포괄보조프로그램인 TANF는 도입 초기에는 비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재정관리와 복지 모두에서 윈-윈의 혁신을 창출했다는 연구가 많았다.

지특회계 전환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원규모는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재정사업들간의 재원배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다양한 재정사업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사업의 내용은 동일해도 재원배분에 대한 재정거버넌스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 방향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회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의제에서 지방의제로 이행되었다. 재원확보의 경쟁 구조가 바뀌는 만큼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서 지역중심과 분권혁신 요소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지역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성과에 따라 재원규모 및 관리방식은 지방별로 다양하게 된다.

총사업비 5조 원 규모의 100만 명 이상이 직접 영향을 받는 대형 사회서비스사업에서 회계단위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을 유지할지 지역지원계정사업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환원할지 또 아니면 지방이양이 합리적인 대안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분권국가-재정분권의 큰 물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별 사업에 대한 맞춤 특성들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나쁜 제도와 좋은 제도는 없다. 잘 운영하는 거버넌스와 잘못 운영하는 거버넌스가 있을 뿐이다. 지역에서 차이와 격차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지역의 다양과 맞춤의 긍정성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활동적 고령화와 복지분권의 결합 그리고 은퇴자와 고령자의 인적자산과 SI 결합 등과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국가표준에서 지역 다양성으로 접근방식 전환은 노인일자리사업 시즌2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생산성의 부정적 영향을 활동적 고령화로 극복할 수 있는 사회투자전략의 제도적 조건이 될 수 있다. 지특회계 전환과 함께 지역과 참여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활동적 고령화 프로그램 속에서 사회기반투자의 핵심적인 지방재정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홍환(202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6(3), 61-102.
- 이재원(2025). 『지방재정론』, 개정판, 윤성사.
- 이재원 외(2017). 『복지재정 운영체계 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의 전환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지역에서 노인일자리는 고령노인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시키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고령노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중 노인일자리사업만큼 높은 정책수요를 보이는 제도나 사업은 흔하지 않다. 특히, 대도시와 달리 고령인구의 비율은 높지만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도시나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개인의 건강과 소득 보장에 더하여 지역의 부족한 복지인력을 공급하는 보완제로 활용된다. 농촌 소도시에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사회활동을 매개로 지역의 복지가 작동되는 공동체 복지의 중요한 생태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면서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지만 재정여건을 좋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높은 지방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지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순기능에 연유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총 9.1만 명을 대상으로 4,322억 원을 편성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부담비율을 보면, 전체 예산의 약 50%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방비 부담으로 구성된다. 현재 노인일자리 예산의 국고보조율은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특별자치도처럼 고령인구의 비율은 높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은 노인일자리 예산의 국고보조예산이 증가만큼 지방비의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하여 정액방식과 정률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률방식을 통

해 국가의 예산편성 시 일정한 기준보조율하에서 지원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노인일자리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50%로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노인일자리 수요와 함께 재정의 여건은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률 지원방식은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킴으로서 노인일자리 적극적 지원과 예산편성을 기피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재정부담의 비형평성도 문제이지만 재정운영과정의 경직성도 큰 문제가 된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재정운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운영의 강한 경직성으로 인해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확대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반대로 수요감소로 인해 예산집행률이 미비해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남은 국고잔액은 무조건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가 당초 계획 대비 증감이 있을 경우 유사 사업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예산전용이 가능하다면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특수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운용과정에서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2026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요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구성

지특회계는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특회계의 예산편성은 크게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자율계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편성되는 반면, 지역지원계정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효율성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우선 사업선정과 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운용된다.

지역자율계정의 예산배정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부담의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다. 다만, 지역자율계정은 중앙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는데 차이가 있다.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금 하에서 지방정부는 지특회계로 지원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특정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사업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춰 지특회계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특회계가 출범한 2005년에는 총 재정규모가 5.4조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4.7조 원으로 약 세배 정도 증가하였다. 지특회계의 계정별 추이를 보면, 지원계정은 2005년 1.3조 원에서 2025년 10.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자율계정은 같은 기간 4.1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지특회계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자율계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선택 이해하기

알기 쉬운 요약

- ◎ 본 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정배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정책동향과 현상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방안을 제시함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환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상당한 변동성을 겪을 수 있음
- ◎ 노인일자리사업의 지특회계로의 전환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확대를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지방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른 불합리한 예산조정이란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음
- ◎ 본 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정배분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한 예산의 차등배분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예산계획과 집행을 통한 안정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제안함

힘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6년 기준 지특회계 예산은 8,278억 원으로 2024년 6,813억 원보다도 약 1,464억 원(21.5%p)이 증가했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지역자율계정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처럼, 최근 지특회계에서는 전체의 25%만이 재정자율성이 부여되는 지역자율계정이고 나머지 75%는 중앙부처의 권한이 강조되는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된 2005년에는 지역자율계정이 76%를 차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2026년도 보건복지부의 총 세출예산 1376조 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73.2조 원이고 지특회계는 4.5조 원으로 지특회계는 전체 세출예산의 약 3.25%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세출예산 중 지특회계 예산은 2025년 1.6조 원에서 2026년 4.5조 원으로 약 2.8조 원 이상 증가하였다.

2026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지특회계의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총 2.4조 원의 지특회계 중 지원계정은 2,310억 원 그리고 자율계정은 20,99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8.0% 정도가 자율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이 지역지원계정보다도 지역자율계정의 비율이 높다는 것

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변화이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방정부의 정책중요도에 따라 증감을 반영하는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 다시말해, 자율계정으로 편성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약 21조 원의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계획·집행될 수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황과 노인일자리 수요감소 등을 근거로 지역자율계정 내 포괄보조사업의 다른 분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이 감소할 수 있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노인일자리 수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도시나 도농복합도시는 대부분 재정여건이 대도시보다도 열악하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확대보다는 지역자율계정 내 특정 포괄보조사업의 예산비중의 확대에 대한 정책목구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반대로 지방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여 지특회계의 동일 포괄보조사업 내 예산의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용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50%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괄보조사업 내 예산의 재조정 과정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축소에 대한 유혹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보건복지부도 지특회계로 전환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을 3년간 변동 없이 집행하도록 사실상 지역자율계정 운영의 유예를 둔 것도 이 같은 이유이다. 지특회계로 전환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당초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포괄보조사업의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최소 3년간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의 변동없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지특회계 재정운용의 3년 유예조치는 흑여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감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사업의 지특회계 전환은 예산을

계획 및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관련 예산의 변동이 불가피하고 이 같은 변동이 예산확대라는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예산축소라고 하는 부정적 방향으로 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특회계로의 본격적인 실행이 추진되는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충분한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대응방안

노인일자리사업의 지특회계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상호 공존한다. 따라서 지특회계 전환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이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를

<표 1> 특회계 규모 및 추이

구분 (회계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지원계정	1.3	1.4	1.5	1.7	5.4	5.8	5.8	5.5	6.2	5.5	5.4	4.9	4.7	4.3	4.8	6.6	7.5	8.2	9.0	10.2	10.8
자율계정	4.1	4.5	5.0	5.8	3.8	3.7	3.6	3.5	3.4	3.5	4.5	4.6	4.7	5.2	5.5	2.3	2.5	2.3	2.4	3.1	3.5
제주세종	-	-	0.3	0.4	0.4	0.4	0.4	0.3	0.3	0.3	0.5	0.5	0.4	0.4	0.4	0.3	0.3	0.3	0.3	0.3	0.4
합계	5.4	5.9	6.8	7.9	9.6	9.9	9.8	9.4	9.9	9.4	10.4	10.0	9.8	9.9	10.7	9.2	10.3	10.9	11.7	13.6	14.7

자료 : 기획재정부(추경 미포함)

<표 2>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구분	사업	계정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지원계정	2,277	2,310	3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965	1,965	
	- 취업지원(취업알선, 민간)		37	37	
	- 시니어인턴십		1,554	1,554	
	- 고령자 친화기업		90	90	
	- 참여형 자원봉사		96	96	
	- 수행기관 인센티브		20	20	
	-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168	16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		221	252	31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90	93	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운영		1.3	0.5	-0.8	
②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자율계정	19,095	20,993	1,898	
③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세종계정	100	113	13	
④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제주계정	375	435	60	
전체			21,847	23,851	

자료 : 보건복지부(2026) 202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실수요에 기반한 사업량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의 예산이 큰 조정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실수요는 실제 근로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일정한 노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지특회계 전환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혹여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계획된다면 당초 계획된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괴리는 포괄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삭감이 전제되는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의 합리적 예산 편성은 지역별로 그리고 노인일자리 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계에 기반하여 계획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수요 기반의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의지가 예산의 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지역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나 재정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은 지방정부의 의무부담비용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심한편이다. 현재처럼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률보조방식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노인일자리사업 총량의 축소만이 아닌 기편성된 예산의 삭감을 유인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지역 간 노인일자리 수요에 기반 한 합리적 예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현재의 정률보조에서 차등보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차등보조의 기준은 노인일자리 수요와 함께 재정자주도 혹은 재정자립도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특회계로의 전환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확대를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지방정부의 책의지에 따른 불합리한 예산조정이라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기존 국고보조사업이 가지고 있던 예산운용의 지나친 경직성을 완화하고 동일한 포괄보조사업 내에서 합리적인 예산의 조정과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중앙정부와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한 차등적 예산배분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지방정부도 과학적 논리에 기반한 체계적인 예산계획과 집행을 통해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실천을 이뤄야 한다.

참고문헌

- 안순태, 이하나, 정순들 (2021).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1(4), 505-525.
- <https://hrcopinon.co.kr/archives/32460>
- Chung, S., Lee, H., & Jung, J. (2025). Design and Evaluation of a Mobile App for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User-Centered Participatory Design and Experimental Mixed Methods Study. JMIR aging, 8, e75950.

고령 사회의 삶과 일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인
김수영

편집위원장
양난주

편집위원
김선웅, 이영수, 최성원, 최은숙, 황보연
남미정, 문대영, 박경하, 오유라, 조홍영

등록번호
ISSN 2765-2777

발행일
2026년 3월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그레이츠송레) 19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전화
02-6731-6126

팩스
02-6731-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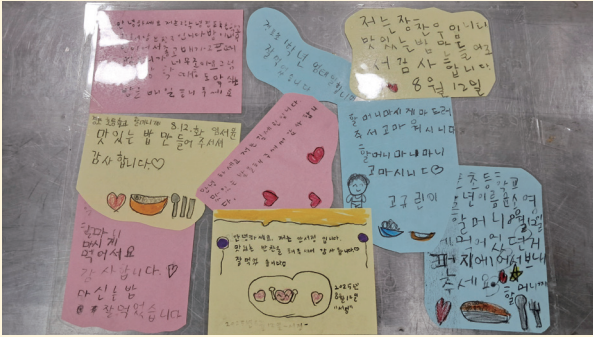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kordi.or.kr

웹진
kordi-webzine.co.kr

디자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02-6731-6126)

- <고령사회의 삶과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 본 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한 끼, 한송정愛한끼

‘한송정愛한끼’는 2024년 보건복지부 시장형 인프라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운영되는 도시락·반찬 제조 사업단으로, 어르신들의 경험과 손맛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한 끼를 전하며, 어르신 일자리와 지역 돌봄 수요를 함께 연결하는 지역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해 도시락과 반찬을 정성껏 조리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식재료 준비, 조리, 포장, 배달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협력하며 사업단을 운영하고,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강릉 시니어클럽 영농사업단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자원 순환과 상생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돌봄 현장과 연결되고 있다. 방학 기간 지역 늘봄학교 아동들을 위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식사 지원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지역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1인 독거노인가구 지원에도 참여하는 등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하고, 도시락 할인 판매를 통한 지역돌봄과 나눔 문화 확산 및 기여를 통해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송정愛한끼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문길 60-1, 1층
- 문의: 033-652-9070

